

독일 한스베르너 진 교수와의 대담 : 독일 통일의 교훈

한스베르너 진 / 독일 뮌헨대학교 경제연구센터 소장, 독일 연방경제부 자문위원
김창권 / 전주대 교역학과 교수



Hans-Werner Sinn

김창권: 오는 10월 3일이면 독일이 공식적으로 통일된 지 5주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5년이라는 기간은 단기적이거나 통일 전의 상황과 통일된 후의 변화를 느낄 수 있고 특히 통일 과정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독일의 통일 경제 정책을 어느 정도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동구 공산권의 붕괴와 동독의 몰락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들어 보고 통일된 후 동독경제의 시장경제 전환에 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말에 동유럽과 독일에서는 누구도 쉽게 예상치 못했던 역사적 대변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역사의 뒤안길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 구 동독의 공산당 총서기장인 호네커도 1989년 1월에 있었던 유럽안보협력회의 연설에서 '베를린 장벽은 50년 심지어 100년 더 존속할 것이다' 라고 장담하였지만, 바로 그해 11월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습니다. 그 이후로 구동독 지역을 비롯한 동유럽 국가에서는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동구 공산권이 붕괴한 원인과 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스베르너 진: 공산주의가 몰락한 원인은 그들의 경제가 무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공산주의 체제를 서서히 허물어 뜨렸죠. 체제 전환의 시점은 고르바초프가 권력을 잡았던 1985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케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소련의 경제 개혁·개방 정책)는 소비에트 제국에서 내적으로 열띤 토론의 과정을 촉발시켰으며



김창권

모든 것을 와해시켰습니다. 막바지에는 그 전개 과정이 가속화되었는데,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 나와 공개적으로 데모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용감하게도 체제를 반대하는 의견을 공공연하게 표명하였었지요.

김창권: 공산주의가 몰락한 이유로 낙후한 공산주의 경제보다 그들이 인권을 박탈하고 탄압해서 무너졌다고는 할 수 없을까요?

한스베르너 진: 그것이 어느 정도는 설명력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본질적인 해답은 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의 인권 탄압은 무엇보다도 공산주의 경제를 운용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들입니다. 즉 공산주의 경제 체제내에서의 경제적 비효율성과 경제적 유인의 결핍은 자연히 폭력적 지배를 가져왔고 이것이 체제내의 이데올로기적 모순을 가져와 이른바 1989년의 동구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김창권: 동독 경제가 몰락한 원인도 그렇다면 경제의 비효율성에서 찾아야 겠군요.

한스베르너 진: 구체적으로 몇가지 언급하자면, 첫째 기업도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지 못했고 노동자도 자기가 공여한 노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경제적 유인 제도가 잘못되었으며, 둘째로 이러한 경제 주체들의 행위 영역을 설정해 주는 경제 제도, 이른바 중앙 기구에 의해 통제·강요받는 사회주의 계획 경제 제도로 인해 극대의 효율을 추구할 수 없었고, 셋째로 소련의 위성 국가로 서방 국가와의 단절은 기술의 낙후성을 가져왔으며, 끝으로 코콤(Cocom)경제의 붕괴로 인해 구동독이 서방 국가들과의 세계 무역 체제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미 국제 경쟁력은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김창권: 독일이 통일됨으로써 독일은 많은 것을 얻었지만 잃은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 통일은 2차 세계대전시의 전승국에

“평화란 최상의 재화(財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어떠한 대가도 결코 높다고는 할 수 없겠죠.”

많은 것을 양보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폴란드에 속한 독일 영토, 즉 임마누엘 칸트가 가르침을 주었던 곳인 오데르강과 나이세강 동편의, 옛날 독일에 속했던 영토를 포기하였습니다. 이것은 독일 통일을 위한 당연한 값 지불입니까? 통일을 통해 얻은 것과 잃은 것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스베르너 진: 독일은 1972년 폴란드와 체결한 불가침 협정을 통해 이미 부분적인 영토 포기를 이행한 것이나 진배 없지만 오데르강 및 나이세강 동편 영토에 대한 양도는 법률적으로 결코 동의된 바가 없었습니다. 또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평화 조약도 없었기에 독일은 공식적인 영토 포기를 할 처지에 있지 못했습니다. 포기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라는 것이 800여년 넘게 독일의 문화가 성장한 곳이기 때문이지요. 독일 문화의 두 대표적인 임마누엘 칸트와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가 그 지역 태생입니다. 저희 집안 또한 부분적으로나마 그 지역 출신입니다. 대략 1000만 명의 독일 민족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그 지역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상 그 이후 그 영토를 되찾으려는 노력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동안 폴란드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하였고 이들을 다시 추방할 수도 없을 뿐더러 원하지도 않습니다. 평화란 최상의 재화(財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어떠한 대가도 결코 높다고는 할 수 없겠죠. 이처럼 오데르강 및 나이세강 동편의 독일 영토를 최종적으로 포기한 것 이외에 동독의 국가 경제를 사유 재산으로 이양하는 데에 있어 미국과 소련의 요구를 반영하였고 귀향하는 소련 군대를 위해 주택 자금을 제공하였으며 향후 독일의 군사력을 37만으로 제한시키는 조약 등을 체결하였습니다.

김창권: 서두에도 언급하였지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는 6년, 공식적으로 독일이 통일된 지는 5년에 가까운 시일이 지났습니다. 통일이 될 때 본인도 외국인으로 그러나 또 다른 분단 국가의 국민으로서 역사의 현장을 목격하였고 독일 국민들의 벽찬 환희의 열기도 느꼈지만 지금 독일을 다시 방문하고 보니 그러한 분위기는 쉽게 찾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더우기 항간에서는 통일에 대한 후유증에 대해 얘기를 하는 듯 합니다만... 즉 양자간의 이질감이 심화되었고 서독인들은 통일 비용의 부담으로 인한 생활고로 불평을 하며 동독인들은 예견치 못했던 취업난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교수께서 쓰신 책 *Kaltstart*(참고: 영문판은 *Jumpstart*로, 한국어판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전환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서울프레스에서 번역서 출간)의 서문에서 느꼈지만 교수님의 통일에 대한 감회는 남달리 컸던 것 같았습니다. 통일을 지켜 보았을 때의 감회가 진 교수께서는 통독이 된 지 몇 년이 지난 지금의 느낌과 대비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요?

한스베르너 진: 모든 사람들에 있어서 환상이 깨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일이 달성된 것에 대해 늘 기뻐하고 있습니다. 분단된 독일은 부당하였었고 저와 마찬가지로 분단의 서편에 친자들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커다란 아픔이었습니다. 통일전 구동독 국경에서의 갖은 방해 공작으로 인해 많은 방문객들이 분노를 폭발시켰었죠. 물론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튼튼한 철바줄로 몇 겹으로 보호된 국경을 기차로 지나갈 때면 늘 곤경을 겪곤 했습니다.

김창권: 통일 후 현재 양 지역 사람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한스베르너 진: 통일후 동독 지역의 사람들이 불만족스럽고 화가 난 것을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민 재산의 대부분이 그 동안 서독 사람들의 수중에 들어갔으니까요. 그러나 다른 면으로는 동독 지역의 매우 많은 사람들이 서독 지역의 도움에 의해 살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추정건대 1991년 이후 대략 7000억 마르크(한화 350조원)가 공공 이전 지출로 동독 지역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김창권: 40여년간 사회주의 하에 있던 동독의 체제를 서독과 같은 자유 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당연지사라 생각합니다. 시장 경제가 구동독에 도입되면서 심각한 과도기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특별히 어떠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1990년 경제 및 통화동맹 직전에 서독 임금 수준의 약 7%를 나타냈던 동독의 공업 부문 임금이 1992년 초에는 50%, 금년 말에는 실효 임금 기준으로 약 85%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스베르너 진: 가장 커다란 어려움은 구동독 산업의 몰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동독 산업의 일자리 중 4/5를 잃어 버렸지요. 이유로는 높은 임금을 꼽을 수 있습니다. 1990년 경제 및 통화동맹 직전에 서독 임금 수준의 약 7%를 나타냈던 동독의 공업 부문 임금이 1992년 초에는 50%, 금년 말에는 실효 임금 기준으로 약 85%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독일 마르크 단위로 환산하면 통일 이후 임금이 약 1000% 상승하였다고 할 수 있는 바, 이의 주요 원인으로서는 통화 전환을 들 수 있고 그 다음으로는 임금 협약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지요. 왜곡된 통화 전환을 통해 이것만으로도 구동독 수출 산업의 생산 관련 실질 임금은 400%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독의 노조에 의해 조종된 동독의 노조와 사용자측으로서 협상에 나선 신탁청간의 단체 임금 교섭은 시작부터 동일한 이해 당사자가 타협의 양측에 앉게 된 것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신탁청은 사실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김창권: 어려웠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공식적으로 통일이 된 지 5년여가 지난 지금, 독일의 경제는 회복되고 호황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독 지역에서 1993년까지는 마이너스의 성장을 보였지만 작년에는 2.5% 그리고 금년에는 3%대의 경제 성장이 예상된다고 하며 인플레이션도 3% 수준까지 떨어지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동독 지역에서도 작년 8% 선의 성장률을 실현하는 등 자본주의 체제가 서서히 정착되어 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통일 이후의 헬무트 콜 정부의 경제 정책이 맞아 떨어졌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지는 않지요? 그리고 지난 해 10월에 실시된 총선을 통해 기존 여당이 다시 승리한 것은 콜 정부의 통일 경제 정책이 옳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닌지요? 아니면 다만 세계 경제 여건의 호전으로 인한 동반 현상으로 보는지요?

“매년 동독 지역은
 자신들이
 생산한 것보다
 2,000억 마르크(한화
 100조 원)
 상당의 경제 자원을
 더 소비하고
 있으니까요.”

한스 베르너 진: 통일 이후 독일의 경제가 상당히 낮은 밑바닥으로 곤두박질하였기 때문에 설사 호황 국면을 맞이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절대적 수준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연방주들이 단지 통일 전 시기의 생산 수준에만 다시 도달하는 데도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 될 것입니다. 콜 수상이 선거에 다시 승리한 것은 매우 많은 돈을 동독에 쏟아 부어서 통일 전보다 오늘날 분명히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있기 때문이지요. 매년 동독 지역은 자신들이 생산한 것보다 2,000억 마르크(한화 100조 원) 상당의 경제 자원을 더 소비하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상황은 그러나 오래 지속될 수는 없을 것 같군요. 또한 금방 얘기한 임금 문제 때문에 독일의 신연방주들은 아직 자생적인 경제 호황과는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창권: 이제는 독일 통일과 관련된 경제적 문제들에 대해 몇가지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누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통일 비용 문제와 조달 방법, 통화 동맹, 사유화 정책 및 고용 정책에 관해 차례로 말씀을 나누기로 하지요.

금년 2월 독일 주간지인 슈피겔지에 의하면 과산된 구동독의 낮은 경제 구조를 경쟁력있게 재구축하기 위해서 금년 말까지 대략 8,400억 마르크(한화 460조 원)가 전례없이 투입될 것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더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되시며 그 근거로서는 무엇을 들 수 있는지요?

한스베르너 진: 통일 비용 추계를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가정들이 필요로 하기에 단정지어서 얼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발표했던 논문(참고: *Kaltstart*)들을 토대로 대략 1조 마르크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액수는 정태적인 조건 하에서 계산되었기에 일반적인 경제 성장에서 요구되는 추가 투자 규모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제 견해로는 한국의 경우 유사한 상황에는 직면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한국에서의 통일이 더 쉬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물론 이 점에 있어서만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김창권: 독일이 통일되던 해에 통일비용을 어떻게 조달해야 하는가로 인해 열띤 논쟁이 있었지요. 신용 차관을 통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올려 징수할 것인지, 어느 것이 독일 경제를 위해 더 나은 대안이라고 생각되시는지요? 독일은 신용 조달의 방법을 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국 경제를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추천하시겠습니까?

“경제적으로는 조세 징수가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허리띠를 더욱 졸라 맬 수 있고 경제 재건을 위해 소요되는 자원을 절약할 수가 있지요.”

한스베르너 진: 정치 경제적으로는 신용 조달이 가장 좋겠지요. 이를 통해 조세 부담을 슬쩍 감출 수 있을테니까요. 경제적으로는 조세 징수가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허리띠를 더욱 졸라 맬 수 있고 경제 재건을 위해 소요되는 자원을 절약할 수가 있지요. 이전 지출을 조달하는 두 방법 중에서 제 생각으로는 후자의 방법, 즉 조세 징수를 통한 재원 조달이 더 나은 해결책이라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은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납세자들이 사전에 세부담을 느꼈더라면 앞서 언급한, 문제가 되었던 구동독 지역에서의 임금 인상과 그로부터 기인한 실업자들을 보조하기 위한 이전 지출들이 매우 많은 저항을 받았을 것입니다.

김창권: 사실상 통일 비용을 추정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 지출이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적자 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통독 후 독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세반 조치가 산업 기반을 재정비·회생시키는 데는 너무 미약하게 이용되고 있고 많은 돈이 소비적이고 비투자적인 곳에 사용된다는 지적을 합니다.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한스베르너 진: 맞습니다. 연금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 보조금이 다, 실업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매우 많은 돈이 소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들도 꼭 특별히 효율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자본 집약적인 생산 과정에서의 투자만을 복돋워 주기 때문이지요.

김창권: 제 기억으로는 1990년 7월 1일에 실시된 급진적인 동독 화폐와의 통화 동맹에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반대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무트 콜 정부가 이를 감행한 것은 표를 의식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옳은 정치적 결단이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즉 경제학자들은 점진적 통일을 구상하였지만 콜 정부는 단기 간내의 흡수 통일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1991년도에 러시아에 있었던 반고르바초프 쿠데타 등을 상기해 볼 때 통독은 어려웠을 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라 남북한간의 통화 동맹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시고요.

“남북한간 통화 동맹에 대해 굳이 얘기해 본다면 하나의 가능성은 변동 환율 제도를 통해 양자간에 점진적인 접근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의 통화 동맹은 가능한 한 피해야 됩니다.”

한스베르너 진: 지난 1990년의 동서독간의 통화 동맹은 독일 통일을 가속화시켰고 통일을 취소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독인들에게 서독으로의 이주를 경제적 유인을 통해 억제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통화 동맹의 경제적 목표로는 동독 경제의 경쟁력을 보전시키는 것과 동독 지역에서의 적절한 유동성 확보 그리고 동독 주민에게 통일 후 새로운 출발을 위한 적절한 기초 자금을 공급하는 것 등을 꼽을 수 있으나, 이것이 그대로 양립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앞서 언급하였듯이 통화 전환으로 인해 노동 생산성에 비해 과대 평가된 동독 지역의 실질 임금의 상승은 구 동독 산업에 막중한 비용 부담을 주었으며 이들의 생존 기반을 위협하고 파괴시켰습니다. 남북한간 통화 동맹에 대해 굳이 얘기해 본다면 하나의 가능성은 변동 환율 제도를 통해 양자간에 점진적인 접근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의 통화 동맹은 가능한 한 피해야 됩니다.

김창권: 제가 알기로 1990년에 설치되었고 1994년 12월에 해체된 독일연방 신탁청은 옛 동독의 국영기업 전부를 민영화하는 과제를 떠맡아 4년 6개월 동안 총 4만 2천 건의 민영화 계약을 체결해 부동산을 포함한

1만 3천 8백여개의 국영기업을 매각하여 2천억 마르크의 투자를 유치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이 신탁청의 사유화 정책에 대해 비판의 소리—예를 들면 매각 방법 및 매각 속도 등—도 많았습니다만 아무튼 한정된 시간에 95%나 되는 옛 동독 국유 재산을 매각하고 기업 합리화를 수행하였다는 것에는 그 업적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탁청을 관장했던 브로일(Breul) 여사는 옛날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어냈던 당시 경제 장관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상을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신탁청이 해낸 일에 대해 논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대차 수상의 자문역인 월터스(Walters)의 견해, 즉 사유화 이전에 중앙 집중적으로 기업을 재정비하는 회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반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독일에 있어서 시장의 힘에 의한 분권적인 기업 재정비가 명백히 더 나은 대안이라고 하지 않았는지요?

한스베르너 진: 공산주의 하에서 낙후된 기업들을 재정비하는 것은 반드시 사유화가 선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수만의 기업들을 국가가 맡아서 재정비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힘에 부쳐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영국의 예는 이 경우에 적당하지 못합니다. 그 곳에서는 단지 몇개의 공기업만을 민영화하였죠. 그러나 사유화는 독일에서 행한 것과는 달리 현금 매각 방식을 통해서 수행해선 안됩니다. 현금 매각 방식을 취하게 되면 대상물의 가격이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칠테니까요.

김창권: 그렇다면 대안책은 무엇일까요?

한스베르너 진: 그보다 나은 것으로 조인트 벤처 방법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들은 단지 주식의 일부분을 소유하고 신탁청은 자기네들이 제공하는 구자본(공산당이 남겨 놓은 낡은 기업들의 자산 가치)의 가치 만큼의 주식을 계속해서 보유할 수 있으며, 이 주식을 신탁청은 다시 국민들에게 분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이 갖

사유화는 독일에서 행한 것과는 달리 현금 매각 방식을 통해서 수행해선 안됩니다.”

“통일 전에 수행되었던 , 양독간의 교역은 통일을 이룩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하지는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역을 통해 간접적으로 흘러 들어간 보다 정확한 정보의 물결은 동독을 분쇄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입니다.”

는 지분은 그들이 기업 재정비를 위해 제공하는 자본과 그들이 갖고 있는 노우 하우의 가치를 이상적으로 반영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우선 어떠한 국민 재산도 무상 증여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또 한편 이 방식으로 인해 더 많은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낡은 기업들의 자본을 매입할 필요가 없게 되지요, 그보다는 위험이 수반되는 자기 자본으로부터의 출자금으로서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에게는 자금이 더 여유가 있게 되며 더 많은 모험을 감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방식은 사유화를 가속적으로 촉진시키고 자본 형성을 높여 주며 미래의 임금 인상 요구에 대해 적절한 영향을 줄 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토의한, 통독 후 채택되었던 소위 고임금·첨단 기술 전략이 왜 구동독 지역에서 발생하였던 대량 실업의 원인이 될 수 있는가를 자연스럽게 설명해 줄 수도 있지요.

김창권: 한국이 통일될 경우 북한 경제의 분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경제 정책으로 이것이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되시는지요?

한스베르너 진: 진심으로 희망컨대 한국이 우리들이 저질렀던 실수를 반복하지 말기를 바란다고만 답변하고 싶습니다.

김창권: 분단된 한국의 상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더해 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서는 역사적 필연성으로 독일의 통일을 인식하셨는데 그렇다면 현 역사상에서 한국의 통일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그리고 남북한이 분단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한스베르너 진: 한국과 같은 위대한 문화 민족이 분단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지 못한 상태입니다. 한국의 고귀함, 한국의 역사, 그리고 한국인들이 통일을 성취할 것입니다.

김창권: 구동서독간의 교역 및 접촉은 브란트 전(前) 수상의 동방 정책을 기점으로 하여 활발해 졌고 이것이 결국은 독일의 통일에 일조하

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구동서독간의 교역이 민간의 특별한 저항 없이 진행되었던 것은 서독의 동독에 대한, 즉 공산주의에 대한 어떠한 불안감도 없었기에 쉬웠지 않았는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남북한간에 전쟁의 경험을 겪어 공산주의에 대한 피해로 인해 정서적으로 북한과 가까워지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평화적 통일은 역사적 사명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수행해야 할 과제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사전 준비 과정을 잘 이끌어 나가야 할 터인데 진교수께서는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당사자인 남북한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십니까? 구동서독간에는 어떠하였는지 비교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스베르너 진: 통일 전에 수행되었던 양독간의 교역은 통일을 이룩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그것은 서독의 TV를 시청할 경우 잡아 들였던 조치를 없앴든지 또는 동서독인들의 방문을 쉽게 한다는 것조차까지 구동독의 권력자로 하여금 정치적으로 묵계하는 정도로 기여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역을 통해 간접적으로 흘러 들어간 보다 정확한 정보의 물결은 동독을 분쇄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입니다.

김창권: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하시는 연구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교수님께서 쓰신 책 *Kaltstart*에 대해 자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스베르너 진: 현재에는 사회 국가를 통한 소득 분배와 재정의 경쟁성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후자는 우리 유럽인들에게는 특별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지요. 제가 저술한 책에 대해서는 단지 희망할 뿐인데, 그 책이 선입관없이 객관적으로 독일 통일의 경제적 문제들을 파헤쳤기를 바라는 것이며, 그 책이 또한 한국에게 하나의 교훈을 전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 뿐입니다. **統**